

ILO와 고용정책 : 과거와 미래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2019)는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우리는 일을 통해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며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일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성, 소속감 및 목적의식을 부여한다. 우리는 일을 통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일은 또한 사회적 결속을 형성하게 하는 연계와 상호작용의 사회연결망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일과 노동시장을 조직하는 방식은 사회가 성취하는 평등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18)

이러한 점에서 실업은 개인으로 하여금 일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상실하게 하고 각종 복지혜택의 손실을 겪게 하는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손실이 가족, 공동체 및 사회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실업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생산능력의 저하를 의미하며, 숙련 및 경험 측면에서는 인적역량의 잠식에 해당한다.

고용이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고용 문제가 ILO 창립(1919년) 이래 가장 중요한 활동 영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실제로 ILO 현장 전문에서는 ‘실업의 예방’을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ILO의 역사에서 실업의 예방은 한결 같은 목표로 남아 있다. 하지만 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ILO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일련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본 논문은 고용 분야에서 ILO의 정책, 즉 ‘고용정책’의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고용정책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본 논문의 목적상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full, productive and freely chosen employment)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 정의한다(ILO 제122호 고용정책협약, 1964년).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서 설명되겠지만, 이러한 ‘적극적 정책’이 다루어야 할 분야와 전반적인 경제 및 개발 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항상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 “태초에 세상이 있었다”: 경제위기, 전쟁 및 케인즈주의¹⁾

ILO의 출범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만성적인 실업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실업을 시급히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본주의의 회복력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확신도 그 출범 배경에 있다. 최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결정한 역사적인 제1호 협약을 채택한 이후, ILO는 제2호 협약의 주제를 실업으로 선정하였다(실업 협약, 1919년). 협약에 수반된 권고(권고 제1호)가 고용 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공지출이라는 케인즈적 발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2호 협약의 범위는 통계와 정보, 공공고용서비스 및 실업보험에 국한되어 있었다.

고용정책 분야에서 ILO의 초기 활동(1920년대와 1930년대)은 경제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분석 및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되었다. ILO는 생산량 변동(또는 경기순환)이 실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량과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국제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1) 아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은 Gerry Rodgers, Eddy Lee, Lee Swepston and Jasmien Van Daele (2009), *국제노동기구와 사회정의(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Quest for Social Justice), 1919 - 2009*, Geneva: ILO 참조.

간의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에 의해 좌초되었다고 분석하면서 ILO는 당시 국제지불제도의 내재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중앙은행의 설립, 고용지수를 이용한 수요관리, 공공근로사업의 적극적 활용, 경기 침체기에 총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임금정책의 활용을 제안했다. 어떤 의미에서 ILO는 케인즈주의의 부상을 훨씬 앞서 대비했다고 볼 수 있다. 케인즈는 *일반이론(General Theory)*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ILO의 일관된 이해”를 언급했다.²⁾

결과적으로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실업이 개인적 실패가 아닌 경제시스템의 실패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국가는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실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수용되었다. 그 무렵 고용정책 조치들은 제2호 협약에서 구상된 범위보다 훨씬 더 넓어졌으며 ‘완전고용’의 개념이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ILO는 1944년에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동 국제기구에 위임된 임무를 재정립하게 되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로 잘 알려진 필라델피아 선언은 완전고용이라는 목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 ILO 세계고용 프로그램(World Employment Programme, 이하 WEP)

ILO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생성된 동력을 기반으로 고용 관련 활동을 확대했다. 특히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조성방안에 집중했다. 이러한 정책 틀(policy framework)의 발전과 함께 그 정책 틀을 개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 역시 증가했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있다. ILO는 1950년대까지 선진산업국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난 국가의 대열이 늘어나면서 신생독립국의 산업화(또는 경제발전)와 완전고용의 달성 방안에 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ILO보다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의 경제사회이사회

2) Keynes, J.M.(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lan, p.349.

(ECOSOC)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근본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UN의 관련 활동은 아서 루이스(Arthur Lewis)와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선구적인 연구결과물인 ‘개발경제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50년대의 상황은 개발전략과 고용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이슈가 ILO 활동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고용정책은 숙련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개도국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인 불안정 고용과 비공식 고용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책 편향은 선진국에서 강력한 일자리 증가세와 함께 숙련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ILO가 고용정책 분야에서 개도국에 제공한 기술적 지원의 대부분은 직업훈련제도의 수립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원활동은 의미는 있었으나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다. 개도국에서는 투자가 불충분한 데다가 구조전환이 더디게 진행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ILO의 접근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완전고용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한 ILO는 고용정책협약(제122호)을 채택했다. 동 협약은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과 그 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날에도 시의성을 지닌 이 협약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국가의 발전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회원국에서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ILO의 의지를 명확히 천명했다는 점이다. 완전고용은 선진산업국에서는 널리 수용되는 목표였으나 개도국의 경우 적용가능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동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을 조율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ILO 감시기구와 기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정책 조율이 가능해진 것이다. 셋째, 동 협약은 고용정책을 ILO 핵심가치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은 ‘완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이 선택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노사정의 참여를 통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

3) Rodgers et al.(2009), p.185.

두 번째 변화는 1969년 WEP의 출범이었다. 제122호 협약을 개도국에 적용하겠다는 ILO의 야심 찬 계획과 함께 출범한 WEP는 고용중심적 전략으로 경제발전과 빈곤감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생산적 고용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며, 따라서 고용중심적 개발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선호할 만한 대안이라는 확신이 WEP를 견인한 원칙이었다.

WEP가 추진한 정책 틀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몇 가지는 언급할 가치가 있다. 먼저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조치(예: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 외에도 누진과세, 토지 개혁 및 독점 규제와 같은 강력한 재분배 조치들을 촉구했다. 이러한 정책 조치들은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모두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다. ‘성장을 통한 분배(Distribution with growth)’는 WEP의 캐치프레이즈였다. 둘째, WEP는 개도국에서 수행된 일련의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비공식 고용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식을 개발했다. 당시 비공식 부문은 ‘불법’ 및 ‘기생’ 활동과 동의어로 취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공식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또는 비공식 고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WEP는 비공식 부문이 도시와 농어촌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다 긍정적인 정책적 접근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을 제공’하며 공식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권고는 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결국에는 많은 개도국과 국제기구가 비공식 부문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 격동의 시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ILO가 고용정책에 큰 영향을 남겼던 시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어진 1980년대는 격동의 10년이었다. 이 시기는 경기침체와 영국의 마가렛 대처 및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부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레짐(policy regime)은 자유시장주의 논리를 이용하여 ILO 활동의 토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국제노동기준과 노동시장 규제의 사회경제적 혜택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다. 노동기준과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

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영화 및 복지국가의 약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 노조와 단체교섭의 역할 축소 및 지위 약화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개도국 역시 이러한 변화를 비껴갈 수 없었으며, 실제로 IMF와 세계은행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적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실험의 선포에 설 수밖에 없었다.

현재 소위 ‘적하경제학(trickle-down economics)’으로 불리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ILO가 내놓은 대응은 제한적이고 효과도 미미했다. 무엇보다도 당시 이 정책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굳건했기 때문에 ILO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ILO 내부에서도 노사정 삼자구성 주체 간(특히 노측과 사측 간) 견해가 양분되었기 때문에 정책 대안에 대해 나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주요 거시경제 및 구조전환에 관한 ILO의 전문적 역량은 점차 약화되었고 그 결과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역시 하락했다.

1990년대에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구 공산권 국가에서 중앙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세계적인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에도 세계은행과 IMF가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충격요법’ 또는 ‘빅뱅’ 접근방식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민영화, 무역 및 환율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고통스러운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대규모 실업을 야기하고 잠재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저 수준의 고용보호와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강력한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외면을 당했다. 이러한 제도는 급진적인 경제이행 과정에서 절실히 요구되었다. 불리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빅뱅’ 접근방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ILO의 경고는 주류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울리지 못했지만, ILO는 『세계고용보고서(World Employment Report)』 등을 포함한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ILO는 세계적인 고용문제는 임계점에 도달했으므로 조율된 행동(concerted actions)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완전고용이라는 목표가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목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당시 유행했던 ‘노동의 종말’에 관한 주장과 완전고용에 반대하

는 신자유주의적 냉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 양질의 일자리 의제(Decent Work Agenda) 및 세계 고용 의제(Global Employment Agenda)를 통한 고용정책의 부활

2000년대 말부터 상황은 다시 변했다. 특히 1999년에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이 도입되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동 개념의 4대 전략목표로서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ILO는 고용정책에 관한 일련의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으며 그 결과물이 ‘세계 고용 의제’로 탄생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하에서 ILO는 정책연구를 강화했으며 당시 지배적인 정책 틀의 근거를 이루는 신화의 정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세계화가 혜택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혜택의 불균등한 배분이 불평등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ILO는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시급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둘째, 노동시장의 근시안적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소득의 측면에서 반생산적(counter-productive)이어서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다. 고용과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예: 임금협상, 고용보호,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설계한다면 노동시장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거에 기반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ILO는 특히 IMF와 OECD 및 세계은행의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 편향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셋째, ILO는 모든 경제 및 산업 정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류화하는 ‘친고용적’ 거시경제 정책 틀을 제안했다. 넷째, 숙련개발 및 교육훈련은 ILO 고용정책 틀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 분야에서 ILO는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특히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숙련인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인 스킬 미스매치(skill mismatches)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 일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

기술변화의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여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노동의 종말’에 대한 대중의 불안이 함께 상승한 반면, 소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 방안(예: 보편적 기본소득)을 모색하는 노력 또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인간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핵심적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일의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일의 미래에 관한 논의는 현재의 기술변화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일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최근 몇 년간 경기대침체(Great Recession)와 일의 미래에 관한 논의 속에서 완전고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예: 지속가능발전목표 8(SDG8))이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완전고용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전략과 접근방식으로 정책 틀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개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두 가지 전제는 모두 일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평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일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GDP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 척도가 측정하는 ‘유급노동’을 넘어서야 한다. 정책 목적상 일의 개념은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생산적 무급노동(예: 돌봄 노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예: 임금)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인적자원의 저활용은 소득과 생산량의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키며, 이것은 개인(예: 인적자본의 잠식)뿐 아니라 경제 전반(예: 잠재생산량의 감소)에 대한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경제위기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실업이 건강, 가족, 사회적 및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인적자원의 저활용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경제적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러한 비용은 보통 일에 대한 시장에서의 보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적 가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학자들의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일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인정하는 것은 향후 정책방향의 수립에 상당한 함의를 갖는다. 진정한 문제는 사실 로봇이 아니라 필요한 것보다 더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의 경제모델이다.

<표 1>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3대 핵심 의제와 10대 권고

<p>인간능력에 대한 투자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애과정 동안 숙련습득, 숙련향상교육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경로를 구축하고, 고령근로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이행(labour market transitions)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정책 및 전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3. 남성과 여성이 돌봄 책임을 동등하게 분담하도록 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며, 여성의 집단적 이해대변을 강화하고, 성차별을 없애고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시킴으로써 성평등을 위한 변혁적이며 측정가능한 의제를 이행한다. 4. 지속가능한 자원과 연대의 원칙 및 위험분담원칙을 기반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출생에서 노년까지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p>노동제도에 대한 투자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노동기본권, ‘적절한 생활임금’, 근로시간 제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을 포함하는 노동보호 최저선(a labour protection floor)을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노동권(Universal Labour Guarantee)을 확립한다. 6. 보장받은 최저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하는 기업의 필요를 조건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무일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지를 늘리는 근로시간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간주권(time sovereignty)을 확대한다. 7. 공공정책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이해대변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 8.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술을 활용 및 관리하고, 기술에 대해 ‘인간 주도적’ 접근방식(human-in-command approach)을 채택한다.
<p>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10. 실물경제에 대한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고, 웰빙,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평등을 향한 성과를 측정하는 보충지표를 개발한다.

자료 :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201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표 2, p.51).

기업은 일자리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이러한 결정이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 또는 국가는 사적 이익을 사회적 이해관계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사람들이 생애주기 동안 수많은 일자리 이행경로를 탐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날 일의 세계에서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하게 될 구체적인 정책 조치들이 바로 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스웨덴 총리의 리더십하에서 시작된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표 1 참조). ILO는 보고서의 권고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의 고용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6월 열리는 ILO 설립 100주년 총회의 결과물 역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KLI**